

정책연구자료 95-04

韓國人の「 삶의 질」
-人間開發을 중심으로-

李顯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目 次

I. 人間開發(Human Development)의 定義	5
1. 人間開發 paradig의 成立背景	6
2. 人間開發 paradig의 設定	8
3. 人間開發指標(Human Development Index)	10
4. 男女間 地位隔差를 考慮한 人間開發指標(GDI & GEM)	16
II. 人間開發指標로 살펴본 韓國人의 「삶의 質」	22
1. 平均的인 人間開發指標로 본 韓國의 位相	22
2. 男女隔差를 考慮한 韓國人의 「삶의 質」	25
가. 能力開發水準에서 본 韓國人의 「삶의 質」	25
나. 能力發揮機會의 擴大로 본 韓國人의 「삶의 質」	32
3. 高齡化社會의 到來와 韓國人의 「삶의 質」	41
III. 結 論	49
參考文獻	52

表 目 次

〈表 1〉	追加的 人間開發指標의 構成	13
〈表 2〉	人間開發指標로 본 韓國의 位置(1992年 基準)	22
〈表 3〉	嬰兒死亡率과 母性死亡率의 國際比較	24
〈表 4〉	性別 40~44세의 死亡率 國際比較('89~'92)	24
〈表 5〉	男女隔差를 考慮한 人間開發指標(GDI)로 본 韓國의 位置(1992年 基準)	26
〈表 6〉	初·中·高等教育機關의 男女間 就學率 比較('90~'93)	29
〈表 7〉	性 및 年齡階層別 平均教育年數의 男女間 隔差 推移	30
〈表 8〉	男女間 高等教育機關의 就學率 隔差	30
〈表 9〉	女性權限尺度(GEM)를 통해 본 韓國의 位置	33
〈表 10〉	女性の 經歷開發 機會附與의 平等度에 관한 國際 比較	34
〈表 11〉	韓·美間 男性對比 女性公務員의 占有率 比較	35
〈表 12〉	韓·美間 職級別 女性公務員의 占有率 比較	36
〈表 13〉	專門職에의 女性從事者 比率 推移	38
〈表 14〉	主要國들의 非農業部門의 男女間 賃金比('87~'91)	39
〈表 15〉	主要國들의 女性の 勞動人口 比率(1990)	40
〈表 16〉	女性就業者中 無給家族從事者 比率('87~'91)	40
〈表 17〉	60歲의 平均 期待壽命('89~'90)	42
〈表 18〉	出生時 健康期待壽命의 國家間 比較	43
〈表 19〉	55歲 以上 人口의 經濟活動參與率 比較	44
〈表 20〉	居住地域別 年齡帶別 高齡者의 經濟活動參加率	46
〈表 21〉	高齡就業者의 從事狀態와 就業希望雇傭形態의 比較	47

I. 人間開發(Human Development)의 定義

한국사회에서 이룩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質을 얼마나 향상시켰는가 하는 점에 대한 省察의 움직임이 80년대 이래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접하여 外形的인 物質的인 豊饒가 과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분배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이 결과 사회 각집단이 자신의 몫을 찾으려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관심을 배경으로 삶의 質을 접근하는 여러 시각중 人間開發(human development)이라는 概念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삶의 質의 位相을 검토해본다.

이를 위하여 UNDP의 人間開發報告書(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제시하는 人間開發指標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본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UNDP에서 제시하는 人間開發 概念을 중심으로 한 삶의 質의 概念 및 尺度의 妥當性에 대한 검토 평가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人間開發 概念을 원용한 한국인의 삶의 質의 國際的 位相을 검토한다. 이는 단순한 한국의 國際的 順位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삶의 質을 低位에 머물게 하는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인의 삶의 質을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높이는 데 있어서의 주요 관건이 여성과 노인의 문제에 있음이 밝혀 진다. 마지막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뒤따른다.

1. 人間開發 paradigim 의 成立背景

경제발전의 정도가 반드시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지표, 예컨대 GNP나 일인당 국민소득과는 별도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70년대 이래 지속되어 왔다. 삶의 질을 包括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Schuessler & Fisher, 1985; 강동식, 1991; 주학중, 1981). 하나는 삶의 客觀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지표들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노력이며 다른 하나는 主觀적인 지표를 통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은 社會지표를 크게 몇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領域別 지표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들간의 혹은 특정사회에 대하여 다양한 시점들 간의 비교를 통해 삶의 질의 수준 및 변화상을 포착하려는 시도들이다(예, UNRISD의 指標體系, UN의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이는 객관적인 지표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삶의 다차원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삶의 질의 인식에 대한 主觀的 變異(subjective variation)가 크다는 점 및 심리적 측면의 多次元性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삶의 질을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로써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예, Vermunt, et al., 1987; Campbell et al., 1976). 이는 지표의 標準化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들간 및 時系列的인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두 접근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삶의 질의 측정에 있어 客觀的 指標와 主觀的 指標를 함께 고려하려는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예, OECD의 사회적 관심 영역의 체계, 日本의 國民生活指標體系) 客觀的 차원과 主觀的인 차원

이 상호 연결되는 指標體系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삶의 質을 규정짓는 客觀的 조건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삶의 質의 수준을 단일 한 複合指標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삶의 質을 몇개의 영역별로 측정할 경우 사회들간의 비교는 물론이고 특정 사회에 대한 時系列的인 비교 또한 단순하기 않기 때문에 단일한 複合指標를 개발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전혀 성격이 다른 영역들 간에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포함한다. 예컨대 주거, 환경, 교육의 영역들 각각에 대하여 삶의 質에의 기여도에 대한 比重值를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어떠한 통합 시도도 恣意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삶의 質의 다양한 영역들간에 比重值를 부여하는 데에 있어서 自意性を 피하기 위한 시도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 하나는 歸納的인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국가 혹은 지역들에 대한 측정 변수들 서로간의 變量에 대하여 요인분석 혹은 기타 다변수분석기법(Multivariate analysis method)을 통해 각 指標들간의 比重值를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예, Slottje et al., 1991). 이는 加重值의 부여에 있어서 연구자의 自意性を 배제한다는 강점을 가지기는 하나, 왜 그러한 加重值가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의 선택적 사용으로 인한 加重值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닌다. 반면 이론적 구축작업을 선행하고 이러한 이론에 적합한 변수들을 선별한 뒤 변수들간에 서로 다른 加重值를 부여하여 단일한 複合指標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삶의 質에 관련된 이론의 適合性 및 선별된 변수들에 대한 概念的 妥當性(validity)을 둘러싸고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으로서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人間開發 과라다임에 입각한

삶의 質 指標이다. 다음절에서 人間開發 패러다임 및 이에 따라 도출된 人間開發指標(Human Development Index)에 관하여 검토한다.

2. 人間開發 패러다임의 設定¹⁾

人間開發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enlarging people’s choices)’이 곧 삶의 質을 높이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삶의 質의 고양을 위하여 人間開發 패러다임이 근거로 삼는 이념은 “인간이 한 국가의 진정한 富이며, 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이 오래, 건강하게, 창조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人間開發이란 각 개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과정으로 보며 경제개발은 廣意의 人間開發의 하나의 구성 부분으로 이해한다”(UNDP, 1995:11). 이는 한 사회의 목표가 구성된 개인 능력의 최대한 발휘를 통한 자기완성이라는 서구사회의 個人主義 人生觀을 根幹으로 한 것으로 전통사회의 集團主義와 대조되며 또한 개인주의에 수반되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기도 하나 전세계적으로 近代化의 이념적 모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人間開發 패러다임은 다음의 네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Haq, 1995:16~20).

- ① 生産性(Productivity): 인간은 각자의 生産性을 높이고 소득을 가져오는 노동과정에 전적으로 參與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衡平性(Equity): 인간은 동일한 參與機會가 주어져야 한다. 경제적, 정치적 참여에 대한 장벽이 제거됨으로서 이러한 기회에 참여하여 이익을 收穫할 수 있어야 한다.

1) 인간개발 패러다임 및 인간개발지수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하여는 Haq (1995)의 2~4장을 참조할 것.

- ③ 持續可能性(Sustainability): 기회에 대한 參與가 지금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형태의 자원들은 — 물적, 인적, 환경적 자원 — 세대를 거듭하면서 다시 再充塡되어야 한다.
- ④ 權限獲得(Empowerment): 開發은 ‘인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즉, 인간은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 자신이 전적으로 참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決定權을 獲得하여야 한다.

人間開發 패러다임은 이러한 네가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人間開發을 추진하는 것이 발전 및 삶의 質의 고양을 위한 근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原則의 실현을 위하여 UNDP는 다음의 세가지의 부문을 구체적인 實踐領域으로 제기한다(UNDP, 1995, 제1장). 첫째는 건강하고 오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는 지식과 기술을 넓히는 것, 셋째는 물질적인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 세가지의 각 부문에 있어서의 개발이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개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영역에서의 人間開發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확대됨으로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나는 각 영역에 관하여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개발된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의 참여와 기여로서 실현하는 측면이다. 능력의 개발은 이루어 졌으나 이의 사회활용의 기회가 막혀있을 경우, 혹은 사회에의 참여는 확대되나 능력의 개발에 대한 投資가 함께하지 않을 경우 위의 네가지 원칙이 실현되는 人間開發은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이 설정된 人間開發 패러다임은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기존의 삶의 質

에 대한 논의가 客觀的 指標를 나열식으로 제시하거나 혹은 主觀的인 행복도나 만족도를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비교할 때 체계적인 이론적 구축작업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이론적 구축물의 개념적 妥當性과 함께 이 개념이 지시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측정가능한 指標로 얼마나 操作化(operationalization)할 수 있는가에 있다. 人間開發 패러다임이 인간의 삶의 質을 얼마나 包括的으로 잘 概念化하였는가 하는 점은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평가를 보류한다. 다음절에서 人間開發指標를 검토하면서 人間開發 패러다임의 操作化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3. 人間開發指標(Human Development Index)

人間開發指標(HDI)는 위에서 지적한 人間開發 패러다임을 함축하는 세가지 부문에 대하여 어떤 국가 혹은 사회집단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측정한다. 指標의 구축을 위하여는,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많은 나라에 대한 자료가 획득 가능한 최소한의 수의 변수를 이용하여 가장 간단하면서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포착하는 複合指標를 구축하고자 시도한다. 이 複合指標는 다음의 세 이념 영역 및 이에 대응하는 個別指標들로 구성된다. 첫번째 구성요소인 건강하게 장수하는 목표에의 실현 정도를 측정하는 指標로 출생시 期待壽命(life expectancy at birth)을 사용한다. 두번째 구성요소인 지식을 높이는 면에서의 人間開發에 관하여는 文字解讀率(literacy rate)과 初等·中等·高等教育機關에의 就學率(enrollment ratio)을 복합하여 측정한다. 세번째 구성요소인 물질적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指標로는 一人當 實質國民所得(real GDP per capita)을 相對指標로 再尺度化하여 이용한다. 소득의 경우 名目所得이 많다고 하여 비례적으로 삶의 質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比重이 줄어들도록 하는 함수를 적용하여 재조정한다.

이 세 영역에 대하여 각각 觀測值가 미리 설정된 최고의 目標值 및 最低值 사이의 범위에서 最低值로 부터 떨어진 거리로서 상대척도화하여 이들의 단순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人間開發指標(HDI)를 계산한다²⁾. 기대수명의 경우는 85세와 25세를 최고치 및 최저치로 설정하였으며, 문자해독률 및 취학률은 100% 및 0%를 최고치 및 최저치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92년 購買力 等價值 달러(purchasing power parity U.S. Dollar)로 환산하여 일인당 실질국민소득 \$40,000³⁾ 및 \$100을 최고치 및 최저치로 정한다. 소득의 경우 購買力 等價值 달러로 환산한 '92년의 세계평균 국민소득인 \$5,120을 중심으로 이 數値에 도달할 때까지는 온전한 比重을 주고 이 수준을 넘어설수록 比重이 낮아지도록 설계하였다. 이 세 부문의 指標를 單純綜合平均하여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갖는 값으로 人間開發의 정도를 측정하며 이는 序數的인(ordinal scale) 특성을 지닌다. 人間開發指標에서 대략 0.0에서 0.5까지는 下位, 0.5에서 0.8까지는 中位, 0.8 이상은 上位의 수준을 나타낸다⁴⁾.

人間開發指標는 1990년 처음으로 개발된 이후 매년 약간의 수정을 첨가하여 개량을 거듭하였다⁵⁾. 예컨대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指標로

2) 이를 수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text{지표} = (\text{관측치} - \text{최저치}) / (\text{최고치} - \text{최저치})$$

3) 이는 購買力 等價值로 환산한 1992년 세계 평균 실질 GDP가 약 \$5,000 정도임을 고려하여 인간적으로 고상한 삶(decent life)을 영위할 만한 수준의 일인당 소득의 目標值로 정한 값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론적 當爲性은 제시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4) 자세한 수리적 도출과정은 UNDP(1995:134~135)을 참고할 것.

5) 매년 약간의 수정으로 인한 인간개발지표의 時系列 비교상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이 것이 序數的인 성격의 지표이므로 지표 산출에 있어서의 약간의 수정이 序數的인 時系列 비교에서 큰 문제점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

1990년에는 文字解讀率만 포함하였으나, 이후 평균교육수준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이를 다시 1995년 이후부터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就學率로 변경한 것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또한 단일 複合指標에 대하여 행해지는 대표적인 비판들에 대하여도 제한적이거나 답변을 제시한다⁶⁾. 이러한 비판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 데 하나는 概念領域과 이를 측정하는 指標들의 선정에 있어서의 妥當性에 대한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영역간의 差等的인 比重附與에 대한 妥當性의 문제이다.

삶의 質을 대표하는 概念領域의 선정에 대한 妥當性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비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인간의 선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人間開發指標의 산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1년 보고서에서는 인간이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指標(Human Freedom Index)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가용자료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은 별개로 하고라도, 정치적인 자유는 문화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며 국가의 정치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指標가 매우 민감하게 변하여 指標의 安定性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전세계의 다양한 사회문화에 普遍的으로 타당한 指標의 설정에 어려움이 따른다⁷⁾. 또다른 문제점으로 人間開發指標가 한나라의 평균적 人間開發의 수준을 나타내는 指標여서 국민들간의 分配의 불평등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비판에 접하여 1993년 및 1994년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소득의 不平等 程度를 고려한 人間開發指標(Income-distribution-adjusted HDI)⁸⁾를 개발하기도 하였

으로 밝혀졌다(UNDP, 1993).

6) 人間開發指標의 한계점에 대한 비판의 상세한 검토를 위하여는 UNDP (1993:103~112) 및 Haq(1995)를 참고할 것.

7)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 지표는 더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1992년 이후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삭제된다.

다. 그러나 이러한 指標設定에 대한 方法論的인 妥當度에 대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았으므로 이용에 한계가 있다. 반면 남녀간의 不平等에 대한 고려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점에 대하여는 다음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表 1〉 追加的 人間開發指標의 構成

下位 수준의 人間개발 국가	中位 수준의 人間개발 국가	上位 수준의 人間개발 국가
- 기대 수명	- 기대수명 - 5세 미만아동의 사망율	- 기대수명 - 5세 미만아동의 사망율 - 모성사망율
- 성인 문맹율	- 성인 문맹율 - 중고등학교 취학율	- 성인 문맹율 - 중고등학교 취학율 - 고등교육기관 취학율
- Log(일인당 국민소득), (국제적빈곤선까지)	- Log(일인당 국민소득), (국제적빈곤선까지) - 빈곤율	- Log(일인당 국민소득), (국제적빈곤선까지) - 빈곤율 - 지니계수로 조정된 국민평균소득

資料: Sudhir Anand and Amartya Sen, "Human Development Index: Methodology and Measurement," background paper for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UNDP, New York, 1992. Haq(1995:60)에서 재인용.

선진국과 빈곤국간의 현격한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하나의 보편적인 척도로 측정하려고 할때 尺度의 敏感性(sensitivity)이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척도 설정시 빈곤국의 사정에 보다 비중을 둘 경우 선진국 서로간의 차이를 구별해 낼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초래한다. 이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은 하나의 包括的인 指標

8) 이는 일인당 실질국민소득 대신 일인당 실질국민소득에 지니계수를 이용한 평등분배의 정도(1-Gini coefficient)를 곱한 값으로 代置하므로서 계산된다.

에 덧붙여 큰 차이를 보이는 몇개의 집단들 각각의 사정을 반영하는 개별 指標를 함께 제시하여 보완하는 방법이다. 人間開發指標와 관련하여 Anand와 Sen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개의 집단별로 구분한 추가적 人間開發指標의 산출을 통해 단일 包括指標의 한계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表 1〉에 제시된 指標가 채택될 경우 각각의 부분 집단들에 대한 尺度의 敏感度(sensitivity)는 높아질 것이나 반면, 어느 국가의 人間開發의 水準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의 세 집단중의 하나로 먼저 분류해야 된다는 문제점 및 서로 다른 집단간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단일 척도의 구성을 둘러싼 또다른 문제점은 구성 영역간의 상대적인 比重值를 부여하는 일이다. 人間開發指標의 경우 건강, 교육, 소득의 세영역에 대하여 동일한 比重值를 두어 이 세영역의 수치를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취했다. 세 영역 상호간의 因果關係가 분명치 않고⁹⁾ 이론적으로 어느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구체적으로 몇 배 더 중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이상 상대적 比重值를 정하는 문제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세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적용한 결과 공통요인에 대하여 세개의 변수가 同一한 水準의 比重(factor loading)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DP, 1993:109~110). 이는 人間開發指標의 설정 과정이 歸納的으로 충분한 妥當性을 지님을 의미한다.

UNDP는 1990년 이래 매년 세계 각국에 대한 등위를 집계하여 발

9) 교육이 소득을 결정하고 소득이 건강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근접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은 본인의 소득 및 부모의 소득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교육또한 부모의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도가 크기때문에 교육, 소득, 건강에 대한 인과관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

표함으로서 각국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삶의 質을 높이는 노력을 촉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人間開發 정도의 包括的인 指標인 HDI 등위의 발표와 함께 매해 人間開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의 첫번째 보고서에서는 人間開發의 概念을 정립하고 특히 경제성장과 人間開發과의 관계를 명확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991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지출 유형을 분석하여 국가의 자원이 국민들의 인간적 기초욕구 충족을 위해 쓰이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으로서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지의 부족 때문에 국민의 基礎的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92년에는 南北問題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도상국의 人間開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결론으로서 직접원조보다는 국제시장에서 무역과 금융의 기회를 개발도상국에게 확대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93년에는 정치 및 경제의 영역에서 각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는 결정들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면서 分權的인 새로운 인간 중심의 參與秩序를 강조한다. '94년에는 人間安保(Human Security) — 가정, 직장, 지역공동체, 환경에서의 인간의 안보 — 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창한다. 이러한 人間安保의 確立을 위하여 국가 및 세계적으로 군비감축 및 국제협력을 포함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환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95년 보고서에서는 인류 전체가 福利를 추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소홀히 되어왔던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 여성을 포함한 인간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人間開發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세계에서 여성이 처한 다양한 不平等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4. 男女間 地位隔差를 考慮한 人間開發指標(GDI & GEM)

전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간의 사회적 지위 및 삶의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平均值인 人間開發指標(HDI)만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 指標가 의미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質의 실태를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95년도 人間開發報告書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한 사회의 평균적인 人間開發의 水準 뿐만이 아니라 남녀간의 삶의 質의 차이를 고려한 指標를 개발했다. 性別隔差를 고려한 人間開發指標(Gender-equity-sensitive Human Development Index, 이후 GDI로 표기)와 남녀가 동등하게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指標(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후 GEM으로 표기)가 그것이다.

GDI 指標는 남녀간의 격차가 클수록 人間開發指標(HDI)가 하향조정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한 나라의 人間開發指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그 나라의 여성들의 삶의 質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별격차를 고려한 GDI 指標의 산출에서는 성별격차 수준과 평균적인 人間開發 水準을 동시에 고려한다. 여기서 문제는 어느정도의 남녀간 격차가 평균적인 수준의 상승과 맞먹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A국의 文字解讀率이 남자 60%, 여자 30% 이며 평균이 45%인 반면, B국의 文字解讀率은 남자 45%, 여자 40%이며 평균이 43%라고 한다면 평균적인 수준에 중점을 둔다면 A국이 낫다고 볼 수 있으나 男女隔差에 중점을 둔다면 B국이 보다 낫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Atkinson(1970)이 所得不平等度의 측정을 위하여 제안한 함수를 응용하여 격차와 평균 수준간의 상대적인 比重을 정하므로써 이루어 진다(UNDP, 1995:125~126). 이를 위하여 HDI를 계산할 때 단위 指標의 관측치로서 산술평균치를 사용하는 데 반하여 GDI의 계산시에는 단위 指標의 觀測值로서 男女隔差가 고려된 平均

値를 사용한다. 男女隔差를 고려한 平均值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계산된다.

$$X_e = \{ p_f (1 / X_f) + p_m (1 / X_m) \}^{-1}$$

여기서 X_e 는 男女隔差가 고려된 平均值이며 p_m , p_f 는 각각 남녀의 비율이고 X_m , X_f 는 각각 단위 指標의 남자 및 여자에 대한 관측치이다. 이 平均值는 X_m 와 X_f 간에 격차가 클수록 산술평균보다 작아지는 특성을 갖으며 X_m / X_f 값이 커질 수록 여성과 남성의 이 平均值에의 限界寄與度の 隔差도 커진다. 예컨대 $X_m / X_f = 1.5$ 인 경우 여성의 한단위 증가는 남성의 2.3 단위 증가와 맞먹으며 $X_m / X_f = 2.0$ 인 경우 여성의 한단위 증가는 남성의 6.3 단위 증가와 맞먹는다. 즉 어느 사회의 문자 해독율이 남성 75%, 여성 50% 라고 할 경우 ($X_m / X_f = 1.5$), 여성의 文字解讀率에 있어 10% 증가와 남성의 23% 증가가 동일한 成就度を 갖도록 남녀간의 격차를 고려한 평균이 계산된다.

이 공식을 적용하여 각 指標에 대한 平均值는 HDI 계산시와 동일하게 미리 설정된 최고의 目標值 및 最低值사이의 범위에서 최저치로부터 떨어진 거리로서 상대척도화하여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男女隔差를 고려한 人間開發指標(GDI)를 계산한다. 여기서 평균기대수명의 경우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여자의 수명이 남자보다 약 5세가량 높으므로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기대수명을 相異한 尺度로 각각 상대치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남녀간의 소득점유율은 남녀간의 임금비율과 經濟活動參加率 및 男女間 人口構成比에 관한 資料를 이용하여 계산한다¹⁰⁾.

남녀간 격차를 고려한 人間開發指標(GDI)는 평균적인 指標가 안고

10) 상세한 계산 과정에 관하여는 UNDP(1995:130~132)를 참고할 것.

있는 남녀간의 격차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접하여 한걸음 발전된 指標이다. 특히 평균적인 水準과 隔差와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여타 격차만을 고려한 指標, 예컨대 男女差別指標(Discrimination Index)와 구분된다¹¹⁾. 그러나 평균적인 수준과 격차의 정도라는 서로 다른 차원을 단일 指標로 복합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자의 自意性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남녀간의 不平等을 피하려는 정도(extent of inequality aversion) 혹은 不平等을 容認하는 정도에 있어 서로 다른 문화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확대된다. 즉, 어느 정도의 不平等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사회적 혹은 문화적 정의에 있어서 사회 혹은 문화들 간의 차이가 존재할 때 이러한 접근은 한계를 가질 것이다.

또한 한 사회에 있어서도 영역별로 남녀간의 不平等을 容認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접근은 보다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다. 예를 들면 여성의 가정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므로 노동시장에서 획득하는 임금 및 經濟活動參加率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남녀간 격차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며 대신 건강 및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 격차는 옳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다면, 위의 일률적인 남녀간 격차를 고려한 平均指數의 算出方式은 그릇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한계점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에 적용하여 檢證되어야 할 사항이다. '95년 보고서는 전세계 130개국에 대하여 GDI 점수와 각국의 等位를 제시한다.

人間開發指標(HDI) 및 GDI指標는 사회활동에의 참여 정도보다는 기본적으로 人間能力의 擴大라는 점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指標의 구성에서 인간의 기본능력 획득이 그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참여

11) 격차를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에 대한 논의에 관하여는 Coulter(1989)를 참조할 것.

를 통해 실현되는 부분 보다 더 比重이 두어져 있다. 두 부문에서의 향상이 함께 진행될 경우 이러한 부문 간의 比重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건강한 삶이나 지혜로운 삶이라는 능력의 개발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 남성의 지위에 근접해가고 있으나 이러한 기본능력의 증대가 실제 사회참여의 확대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참여의 측면을 강조하는 총체적인 人間開發의 指標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女性權限指標(GEM)는 여성이 남성에 견주어 사회참여 및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어느정도 동등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女性權限指標는 男女隔差를 고려한 人間開發指標(GDI)와 尺度의 의미에 있어 큰 차이를 갖는다. GDI는 尺度 산출에 있어 남녀 격차와 함께 절대적인 평균 수준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므로, 한 사회의 단위 指標에 있어 비록 男女隔差가 크다 하여도 平均值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 平均值가 매우 낮은 다른 나라들 보다 상위의 GDI값을 갖을 수 있다. 반면 女性權限指標의 경우 尺度 계산에 있어 최고치를 50% 즉, 남녀간의 완전평등도에 두고 이 완전평등도에서 떨어진 비율로 상대치화한 값을 사용하므로 이는 남녀간의 不平等의 정도를 측정하는 指標로서의 의미가 보다 강하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GDI가 평균적인 指標인 HDI를 男女隔差를 고려하여 수정한 (Gender-adjusted) 指標인 반면, 女性權限尺度는 여성의 남성에 대비한 사회참여 상대적 정도를 측정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尺度構成에 있어 제로섬(zero-sum)의 概念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女性權限尺度의 계산은 사회참여의 각 영역인 정치, 경제, 및 전문 직업에의 진출 부문에 대하여 각 영역의 최고, 최저치를 각각 50%와 0%에 두고 GDI계산시에 이용한 남녀간의 격차를 고려한 平均值를 관측치에 대치시켜 값을 구한다. 정치의 영역을 나타내는 指標로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경제 영역의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所得占有率¹²⁾,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직에의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에서의 여성고용의 비율을 複合指標 算出의 구성요소로 한다. 위의 세 指標를 복합한 單一 指標가 한 사회의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를 얼마나 包括的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같은 전문기술직의 경우에도 남자의 직종과 여성의 직종이 분리되어 있고 동일 직종에서도 남성이 상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의 차별을 나타내는 性別 業種分離(job segregation)의 程度 등이 얼마나 위의 지표를 통해 대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앞으로 검증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

女性權限指標는 人間開發指標가 갖는 尺度構成의 한계점에 더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한다. 우선 여성의 권한을 정의내리는 이론적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의 권한이 남성의 권한과 제로섬의 관계인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여성의 삶의 質이 가정의 영역 — 협의로는 양육을 둘러싼 영역 — 에 남성보다 조금이라도 더 比重이 두어져 있다면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는 반드시 정치 및 노동시장에서의 成就度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는 않을 것이다. 女性權限尺度는 사회참여 및 성취에 있어 남녀간의 완전평등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女權主義理論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설사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능력의 발휘를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한다 하여도 이를 측정하는 個別指標가 적절히 선택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나타내

12) 이는 노동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므로 가사노동을 통한 비금전적 소득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며, 또한 소득집행에 있어 가족구성원간의 분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는 指標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제시하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정치自由指標(Human Freedom Index)와 마찬가지로 안정된 지표라고 보기 힘들다.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종에의 여성점유율에 있어서도 국가들간의 직업분류체계에 있어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尺度로서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측정하는 세영역에 대하여 동일한 比重值를 두어 산술평균을 구한 尺度 계산 방식에 대한 妥當性 검토도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女性權限 尺度는 여성의 사회참여정도를 包括的 指標로 산출하여 국제간 비교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人間開發報告書는 전세계 116개국에 대하여 女性權限指標(GEM)의 점수와 각국의 等位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1995년 人間開發報告書는 人間開發의 종합적인 수준에 대한 측정수단을 제공함과 함께 남녀간의 격차에 대한 數量的 指標를 제시함으로써 국가간 및 사회구성원간의 격차에 관심을 집중케 한다. 그러나 사회구성원간의 分配의 한 측면인 男女間的 격차와 함께 다른 중요한 측면인 貧富間的 격차 및 고령화 현상과 함께 부각되는 문제인 世代間的 격차를 수량적으로 밝히는 모델 개발은 아직 미진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II. 人間開發指標로 살펴본 韓國人의 「삶의 質」

1. 平均的인 人間開發指標로 본 韓國의 位相

人間開發指標에 나타난 韓國인의 삶의 質은 어느정도 될까? <表 2> 는 '95년 人間開發報告書에서 주요 국가들의 1992년 資料를 근거로 계산된 人間開發指數(HDI)와 指標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數値를 나타낸다.

<表 2> 人間開發指標로 본 韓國의 位置(1992年 基準)

국	명	HDI등위 (174개국중)	기대수명 (년수)	문자해독률 (%)	평균취학율 ¹⁾ (%)	일인당실질 소득(PPP\$)	HDI 지수
미	국	2	76.0	99.0	95	23,760	0.937
일	본	3	79.5	99.0	77	20,520	0.937
홍	콩	24	78.6	91.2	70	20,340	0.905
한	국	31	71.1	97.4	79	9,250	0.882
싱	가	35	74.8	89.9	68	18,330	0.878
타	이	58	69.0	93.5	53	5,950	0.827
개발도상국		-	61.5	68.3	54	2,591	0.570
선진산업국		-	76.1	98.3	80	15,291	0.916
전	세	-	62.8	76.0	58	5,410	0.759

註: 1)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취학율(enrolment ratio)의 산술평균임.
資料: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1995.

1992년 資料를 기준으로 산출된 人間開發指數에서 캐나다가 0.950 포인트를 기록하여 조사 대상 174개국중 1위를 기록했다. 韓國의 人間

開發指數는 0.882로 전세계적으로 상위집단(상위 18%)에 속하며 1995년 보고서에 제시된 총 174개국중 31위를 차지한다. 이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3위), 홍콩(24위)에 이어 세번째이다. 이 순위는 일인당 국민소득만을 고려한 등위인 38위보다 높은 순위로서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여 문자해독률 및 평균 취학률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반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나타내는 기대수명이나 경제적으로 豊饒한 삶을 나타내는 일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아직 선진산업국의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기대수명의 경우 선진산업국보다 5년 이상 낮으며 일인당 실질소득은 선진산업국 平均値의 60%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의 경우 171개국중 북한 및 폴란드와 함께 53위를 기록하면서 일인당 GDP의 等位(38위)와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격차는 두가지 요인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국민 건강의 상대적 희생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성 40세의 사망율이 동일 소득 수준의 국가들 보다 현저하게 높음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다른 해석으로는,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결과 소득 수준의 상승이 기초 보건의료에의 투자로 이어져 국민의 증진된 건강으로 반영되는 데 있어 時差가 필요하다는 논의이다. 먼저 人間開發 水準이 높은 나라들 간의 건강한 삶을 計測하는 補助的 指標로 제안된 嬰兒死亡率¹³⁾ 및 母性死亡率을 비교해 본다.

13) 가용 자료의 제약으로 5세 미만아동의 사망을 대신 영아사망율로 대신한다.

〈表 3〉 嬰兒死亡率과 母性死亡率의 國際比較

	미국	일본	영국	홍콩	싱가폴	한국	칠레
영아사망율('90~'91) (단위: 출생 천명당)	8.9	4.4	7.3	6.1	4.4	12.8 ¹⁾	16.8
모성사망율('88~'90) (단위: 출생 십만명당)	8.4	8.6	8.1	5.7	2.1	30.0	40.5
기대 수명('92) (단위: 년)	76.0	79.5	76.2	78.6	74.8	71.1	73.8

註: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1993.(추정치)
 資料: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4.

UN, 1992 Demographic Yearbook, 1994.

위의 표를 보면 기초건강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출생 천명당 嬰兒死亡率에서 한국(12.8명)은 선진국(4~8명)은 물론이고 홍콩(6.1명), 싱가포르(4.4명)의 두배 이상에 달한다. 단지 우리나라 보다 일인당 국민소득 및 人間開發의 水準에서 뒤지는 칠레의 경우 보다 조금 앞서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基礎保健의 다른 指標인 母性死亡率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출생 십만명당 母性死亡率은 30.0명에 달하며 이는 선진국의 8~9명 수준이나 홍콩(5.7명), 싱가포르(2.1명)에 크게 뒤져 있다. 한국이 선진국 및 우리와 사회경제적으로 유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保健水準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많은 노력이 기울여 져야 함을 위의 표는 단적으로 보여 준다.

〈表 4〉 性別 40~44세의 死亡率 國際比較('89~'92)

(단위: 천명당)

	캐나다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칠레	아르헨티나	한국
남 자	2.3	3.4	1.9	2.0	2.4	3.6	3.8	5.5
여 자	1.2	1.7	1.0	1.0	1.5	1.8	2.2	2.1

資料: UN, 1992 Demographic Yearbook, 1994.

위의 표는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이인 40~44세 연령집단의 사망율의 국제비교를 보여 준다. 이 연령집단에 속하는 한국의 남성들은 연간 천명당 5.5인이 사망하여 선진국 및 동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하여 두배 이상의 사망율을 기록한다. 이는 우리나라 보다 소득수준이 뒤지는 칠레나 아르헨티나와 비교해도 1.5배 이상 높은 數値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격차가 덜하기는 하지만 역시 한국의 40대 여성들은 선진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국가들 및 우리와 人間開發水準이 유사한 칠레에 비하여도 뒤진다.

한국인의 건강수준이 왜 이렇게 여타국들에 비해 뒤지는가 하는 점에 대한 위의 두가지 가설 중 어느 설명이 더 타당한지는 앞으로 경험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이나 위의 두가지 표의 검토를 통해 概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이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基礎保健水準에서 크게 뒤져 있으며 급속한 성장에 따른 노동부담의 과중으로 사회에서 한창 활동하는 연령층의 건강이 희생되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男女隔差를 考慮한 韓國人の「삶의 質」

가. 能力開發水準에서 본 韓國人の「삶의 質」

人間開發指標가 평균적인 삶의 質의 수준만을 나타낼 뿐 사회구성원간의 隔差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발의 정도가 낮을수록 성장의 이익이 사회구성원에게 고르게 配分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995년 人間開發報告書에서 제시하는 남녀간의 격차를 고려한 人間開發指標(GDI) 및 女性權限指標(GEM)는 한국과 같이 개발도상국으로 부터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들에게

일반적인 성장수준에 비교하여 남녀간 삶의 혜택의 분배면에서 얼마나 뒤떨어졌는가를 파악하도록 해주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평균적인 수준과 함께 남녀간의 隔差의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GDI 指標와 남녀간의 사회참여의 격차를 측정하는 GEM 指標를 통해 한국사회의 人間開發의 수준과 남녀간의 격차의 정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정도의 남녀간의 차이가 한국인이 합의하는 바람직한 남녀간의 격차인가를 둘러싸고 異論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능력의 개발 및 사회참여를 통한 능력의 실현에 있어서 남녀간의 완전한 평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의 표는 주요국들간의 평균적인 人間開發指標(HDI)와 남녀간의 隔差를 고려한 指標(GDI)간의 비교를 제시한다.

〈表 5〉 男女隔差를 考慮한 人間開發指標(GDI)로 본 韓國의 位置
(1992年 基準)

국 명	GDI등위 (130개국중)	기대수명 남녀격차 (년수)	문자해독률 남녀격차 (%)	평균취학률 남녀격차 (%)	소득점유율 남 여 (%)	HDI등위 - GDI등위
스웨덴	1	- 5.7	0.0	- 2.6	58.4 41.6	8
미 국	5	- 6.8	0.0	- 6.2	65.4 34.6	- 3
일 본	8	- 6.1	0.0	2.1	66.5 33.5 ¹⁾	- 5
홍 콩	17	- 6.2	9.2	0.5	70.6 29.4	3
한 국	37	- 7.6	3.3	8.5	78.0 22.0	- 11
싱가폴	28	- 5.0	11.1	2.6	71.1 28.9	1
타 이	33	- 5.5	4.4	0.3	65.4 34.6	15
칠 레	43	- 7.0	1.5	0.8	80.2 19.8	- 15

註: 1) 비농업고용자의 남녀임금비율을 75%로 추정계산함.

소득점유율 = (여성소득 / 남녀총소득) X 100.

資料: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1995.

男女隔差를 고려한 人間開發指標에서 韓國의 等位는 조사 대상 130개국중 37위로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본 순위인 38위에 근접하나 男女隔差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순위보다 11위가 낮다. 즉 평균적인 人間開發 수준에서 유사한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韓國의 남녀간의 隔差의 정도가 過多함을 알 수 있다. 韓國의 男女隔差는 서구 선진국과는 물론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하여도 현저히 뒤떨어진다. 홍콩의 경우 GDI등위가 HDI등위보다 3등급 높고, 싱가포르 및 태국의 경우 각각 1등급 및 15등급 높음에 비하여 韓國의 경우 GDI등위가 HDI등위보다 11위가 낮다는 것은 韓國이 이 나라들 보다 남성위주의 사회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앞으로 발전 전략에서 우리와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이들 나라들 보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유사한 人間開發 수준을 보이는 나라들과 비교해 어떤 부분의 男女隔差가 보다 더 韓國의 GDI등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면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평균기대수명을 살펴보자. 위의 표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은 韓國인의 남녀간 출생시 期待壽命의 隔差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 및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준인 나라들의 경우보다 크다는 점이다. 韓國의 남성들이 이 나라들의 남성들보다 여성에 비교해 약 2년 가까이 일찍 사망함을 알 수 있다(韓國의 남녀간 출생시 期待壽命의 隔差는 7.6년이나 선진국의 경우 이 수치는 약 5~6년임). 이는 韓國의 여성들이 유사한 경제수준의 타 국가의 여성들 보다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韓國의 남성들이 이들 나라의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사망하기 때문으로, 앞에서 분석한 韓國 남성의 건강부문의 삶의 質이 현저히 열악함을 재확인해 준다.

韓國인의 기초적인 인적자원이 잘 개발되어 있음은 타국가와 비교

한 성인의 文字解讀率 비교에서 나타난다. 한국인의 문자해독률은 97.4%에 달하며 남녀간의 隔差도 3.3%에 불과하다. 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의 男女隔差가 9.2%와 11.1%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기초적인 인적자원에 있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남녀차가 덜함을 의미한다. 반면 인적자원 개발의 또다른 尺度인 平均就學率의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녀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平均就學率¹⁴⁾의 경우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약 1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就學率 隔差는 이들 나라들 보다 6~8% 포인트 높다. 이는 다음 절에서 분석할 한국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이들 나라들에 비해 낮은 한가지 원인으로 이들의 남성에 대비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가능케한다.

한국 여성의 就學率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상황을 보다 상세히 검토해 보자. 다음의 <表 6>은 초·중·고등교육기관의 국가간 就學率 비교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표를 살펴보면 初等 및 中等教育의 경우 한국인의 男女間 教育水準의 隔差는 선진국과 유사하게 미미하나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高等教育의 경우 平均就學率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수준에 크게 뒤지지 않으나 男女間의 隔差는 매우 크게 벌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 34.6%의 여성들이 高等教育을 받고 있음에 비교하여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은 57.2%로 남녀간 就學率 隔差는 22.6%에 달한다. 이 수치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높은 것과 對比됨은 물론, 선진국중 가장 男女隔差가 큰 일본의 경우 남성과 여성간의 高等教育就學率의 隔差(10.5%)와 비교해 보아도 과다한 隔差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동아시아의 여타국가들과 비교하여도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 예컨대

14) 여기서의 평균 취학율은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에의 취학율(enrolment ratio)을 의미함.

홍콩의 경우 高等教育就學率의 男女間 隔差는 4.2%에 불과하며 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도리어 2.1% 높은 고등교육 就學率을 보인다.

〈表 6〉 初·中·高等教育機關의 男女間 就學率 比較('90~'93)¹⁾

(단위: %)

국 가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미 국	104 ²⁾	104	103	94	87	90	76.2	64.1	79.6
프랑스	106	107	105	102	100	104	45.6	41.1	50.3
일 본	102	102	103	97	96	98	31.5	36.6	26.1
한 국	102	101	103	93	92	93	46.4	57.2	34.6
홍 콩	-	-	-	-	-	-	19.6	21.6	17.4
싱가폴	107	-	-	69	-	-	86	-	-
태 국	97	-	-	-	-	-	19.0	18.0	20.1

註: 1)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은 각국의 교육제도의 상위에 관계없이 최초의 6년, 다음의 6년 및 그 다음의 교육과정(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각각 지칭함.

2) 취학률은 각 교육단계별 취학자수를 대상 연령층 크기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00보다 큰 수치는 대상연령층 규모에 비하여 취학자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20~24세로 한다.

資料: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4.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남녀간의 교육수준의 隔差가 앞으로 조만간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表 7〉은 성 및 연령계층별 평균교육년수에 있어 男女間 隔差의 추이를 제시한다.

예상한 바와 같이 〈表 7〉에서 남자의 평균교육 수준은 전 연령 집단에 대하여 1970~'90년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진다. 그러나 남녀간의 교육년수에 있어서의 隔差는 남자의 평균교육 수준이 높아

지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6~19세의 연령집단에서는 의무교육의 확대로 性別隔差가 거의 소멸되었으며 30~39세 및 40~49세의 연령집단에서도 性別隔差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29세의 연령집단의 경우 남녀간의 교육년수의 隔差는 1990년(1.63년)이 1970년(1.33년) 및 1980년(0.89년)의 수치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7〉 性 및 年齡階層別 平均教育年數의 男女間 隔差 推移

(단위: 년수)

		평 균	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970	남자	6.86	5.47	8.81	8.65	6.42	3.06
	여자 ¹⁾	-2.14	-0.26	-1.33	-3.01	-3.06	-1.97
1980	남자	8.67	6.60	10.33	10.19	9.01	5.03
	여자 ¹⁾	-2.04	-0.50	-0.89	-2.09	-3.06	-2.78
1990	남자	10.01	7.70	12.27	11.78	10.65	7.69
	여자 ¹⁾	-1.79	0.08	-1.63	-1.40	-2.31	-3.74

註: 1) 여자의 수치는 남자와의 교육년수의 격차 즉, (여자교육년수 - 남자교육년수)를 의미함.

資料: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表 8〉 男女間 高等教育機關¹⁾의 就學率 隔差

(단위: %)

	고등교육 취학율 ²⁾		
	남 자	여 자	격차(남자 - 여자)
1970	11.5	4.1	7.4
1980	24.3	8.4	15.9
1990	50.0	23.9	26.1
1993	57.9	29.9	28.0

註: 1) 여기서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을 지칭함.

2) 취학율 계산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적령인구는 18~21세로 함.

資料: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表 6〉에서 알 수 있듯이 初等 및 中等教育의 就學率은 남녀 모두 90%를 넘어서므로 男女間의 隔差推移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는 高等教育機關의 就學率 隔差를 집중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表 8〉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여년간 남성의 고등교육기관의 就學率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1970년 11.5%에서 1993년 57.9%로 5배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못지 않게 남녀간의 就學率 隔差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고등교육기관에의 就學率의 남녀간 隔差가 1970년의 7.4%에서 '93년에는 28%로 확대되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80년대 및 90년대에 걸쳐 남녀간의 就學率 隔差가 일관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타 국가와 비교한 한국인의 높은 교육수준이 남녀간의 큰 隔差라는 構造的인 문제점을 감추고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크게 개선될 소지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위의 表는 확인해 준다. 이는 앞으로 여성의 인적자원을 증대시키고 남녀간의 사회적 隔差를 줄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여성의 고급인력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함을 의미한다¹⁵⁾.

마지막으로 人間開發指標를 구성하는 또하나의 구성요소인 소득점유율면에서 한국의 여성은 앞의 〈表 5〉에서 제시된 다른 모든 나라들 보다 작다. 소득의 경우 특히 남녀간의 완전한 평등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남성보다 크며 이것이 여성의 행복에 관계된 정도가 남성보다 크다는 주장을 제기할 경우 이러한 접근은 심각한 도전에 直面한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다른나라들 보다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보다 강조해야 할 정

15)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여성들의 전공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사회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여성의 고급인적자원 축적에 있어서의 남녀간 격차의 정도는 보다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점에 관하여는 김제인(1995)을 참조할 것.

당한 논거가 제기되지 않는한 국가들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여성의 위상을 파악하는 위의 접근은 어느정도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소득점유율은 남녀간 임금수준 및 경제활동참여도에 있어서의 격차를 복합한 指標이므로 각각의 구성부분에 있어서의 隔差를 분해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소득은 사회참여의 결과 얻어지는 收穫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의 男女隔差는 다음 절의 女性權限尺度(Gender Empowerment Measure)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나. 能力發揮機會의 擴大로 본 韓國人의 「삶의 質」

한국인의 人的 資源의 개발 수준과 그들이 그 자원을 사회참여를 통해 발휘하는 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을까? 남성의 능력과 사회참여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함께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수준과의 相關性이 어느 정도인가하는 점에 있다. 다음의 <表 9>는 앞에서 논의한 女性權限尺度(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준다.

각국 여성들이 정치 및 경제활동과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女性權限尺度에 있어 한국은 1995년 人間開發報告書가 제시한 116개국중 90위를 차지한다. 평균적인 人間開發 水準에서는 개발도상국중 가장 상위의 집단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남녀간 사회참여의 隔差면에서는 가장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순위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와 유사한 경제 수준을 보이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뒤져 있을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중근동지역의 일부 회교 및 힌두교 국가들과 아프리카지역의 소수의 極貧國들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더한 男女隔

차를 보이는 나라는 없음을 의미한다. <表 9> 에서도 한국은 여성국회의원 비율, 여성소득점유율, 여성행정관리직 비율에 있어 회교국인 방글라데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흥미롭게도 선진산업국들 중에서 평균적인 人間開發의 程度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일본(3위)이 女性權限附與 程度에서는 이들 나라들 중 가장 뒤떨어져 있는 사실(27위)과 유사하다.

<表 9> 女性權限尺度(GEM)를 통해 본 韓國의 位置

(단위: %)

국명	GEM등위 (116개국중)	여성국회 의원 비율	여성소득 점유율 ¹⁾	여성행정 관리직 비율	여성전문 기술직 비율
스웨덴	1	33.5	41.6	38.9	63.3
미국	8	10.3	34.6	40.2	50.8
일본	27	6.7	33.5	8.0	42.0
싱가폴	35	3.7	28.9	15.7	40.3
북한	50	20.1	38.7	3.7	24.6
타이	54	3.7	34.6	22.2	52.7
방글라데시	80	10.3	22.8	5.1	23.1
한국	90	1.0	22.0	4.1	42.5

註: 1) 여성소득점유율 = (여성소득 / 남녀총소득) x 100.

資料: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1995.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성취의 정도를 측정하는 女性權限尺度는 앞의 尺度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했듯이 尺度의 信賴性 및 妥當性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女性權限尺度에서 나타난 한국 여성의 이러한 열악한 지위가 척도자체의 문제점에 起因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이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UNDP와는 별도로 IMD에서 조사한 여성의 권한에 관련된 국제적 순위를 비교해

보았다. 다음의 表는 여성의 경력개발에의 기회부여도에 관한 국제비교를 제시한다.

〈表 10〉 女性の 經歷開發 機會附與의 平等度에 관한 國際 比較

	핀란드	싱가폴	홍콩	타이	미국	칠레	멕시코	일본	한국
순위(48개국중)	1	3	5	12	19	32	45	47	48
점수(10점만점) ¹⁾	7.35	7.3	7.03	6.45	6.00	5.22	4.24	3.33	3.16

註: 1) 점수가 클 수록 여성에게의 기회부여정도가 남자와 동등함을 의미함.
資料: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세계 각국의 경영관리자들에게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얼마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가를 문의한 결과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조사 대상 48개국 중 여성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보고한다. 이 결과는 女性權限尺度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은 선진국가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국가들 및 한국 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는 나라들과 비교하여도 여성의 人的 資源을 활용하는데 크게 뒤져 있음을 확인해 준다. 물론 위의 조사자료에 많은 저개발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들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검증은 어려우나, UNDP의 女性權限尺度에 어느정도의 신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資料가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어떤 요인이 이렇게 한국 여성의 지위 약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본다.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 및 여성의 행정관리직에의 진출면에서 한국의 여성은 여타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여성국회의원 비율 1.0%, 여성관리행정직 비율 4.1%)을 기록한다. 이는 한국의 여성이 권력의 행사 및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排除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여성들이 선진국의 여성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에서 排除되어 있는가를 아래의 <表 11> 과 <表 12> 의 韓國과 美國간 정부공무원에의 여성진출 현황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본다¹⁶⁾.

<表 11> 韓·美間 男性對比 女性公務員의 占有率 比較

(단위: %)

미 국 ('91)		한 국 ('92)	
연방정부 합계	43.3	행정부	25.6
사무근로자중	48.2 ¹⁾	사법부	21.5
		입법부	28.8
지방정부 (상용고/Full-time) 합계	43.0	행정부의 직별구분 (임시고 포함)	
관리행정직(Officials/Admin.)	30.6	국가공무원 합계(지방)	29.4(18.8)
전문기술직(Professionals)	50.4	정무직	0.9(0.0)
전문기술직(Technicians)	41.3	일반직	12.1(18.5)
안전서비스(Protective service)	13.3	별정직	15.7(39.0)
준전문직(Paraprofessionals)	72.5	기능직	25.7(19.6)
행정보조(Admin. support)	87.7	고용직	86.8(14.4)
기술직(Skilled craft)	4.2	특정직	34.7(0.8)
보수관리(Service/Maintenance)	20.8	연구직/지도직	6.0(21.0)
전체취업자중 여성 비율	45.6	전체취업자중 여성비율	40.2

註: 1) 1987년 자료임.

資料: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s of the United States 1993, 1994.*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16) 공무원의 구성에는 그나라의 정치적 변천과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치 및 사회구조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한미간의 공무원의 구성을 수평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여기서는 공무원 구성의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으로서의 비교가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수평비교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남녀 구성이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왜 이러한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앞의 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은 정부부문에서 특히 뒤져 있다. 정부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43.3%(지방정부, 43.0%)로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중의 여성 비율인 45.6%에 근접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 고용이 행정부의 경우 25.6%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인 40.2%보다 크게 뒤진다. 이를 職種別로 구분할 경우 여성의 참여율이 열악한 정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常用雇傭者(full-time employee)중 여성의 비율이 43.0%이며 이는 관리행정(30.6%), 전문직(50.4%), 전문기술직(41.3%)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직종에의 여성의 참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반면 한국의 경우 臨時雇傭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여도 행정부의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은 29.4%(지방, 18.8%)에 불과하다. 이중 임시적인 고용형태인 고용직에서의 여성의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86.8%), 일반직 공무원의 여성 점유율은 12.1%(지방, 18.5%)에 불과하다. 이를 다시 職級別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表와 같다.

〈表 12〉 韓·美間 職級別 女性公務員의 占有率 比較

(단위: %)

미 국 (연방정부 사무직, '91)		한 국 (행정부 일반직, '92)	
16~18급	-	국가공무원 합계(지방)	11.8(18.5)
13~15급 (\$44,348-\$89,787)	19.6	1~3급	1.4(0.0)
11~12급 (\$31,116-\$48,481)	33.0	4~5급	1.7(2.2)
7~10급 (\$21,023-\$36,818)	55.8	6~8급	11.7(15.6)
1~ 6급 (\$11,015-\$24,598)	74.6	9급	23.5(35.6)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s of the United States 1993*, 1994.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우리나라 행정부 일반직의 상위직급인 1~3급의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은 1.4%(지방, 0.0%)이며 4~5급의 경우에도 1.4%(지방, 2.2%)에 불과하다. 하위직급으로 내려갈 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져 최하위 직급인 9급의 경우 여성이 23.5%(지방, 35.6%)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상위직급인 13~15급(연소득 \$44,348~\$89,787 범위)의 경우 여성이 19.6%나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직급으로 내려갈 수록 여성의 점유율이 높아져 연소득 \$31,000~\$48,000의 범위의 직급에서 33.0%, 연소득 \$21,000~\$37,000의 범위의 직급에서 55.8%, 연소득 \$11,000~\$25,000의 범위의 직급에서 74.6%의 여성 占有率을 기록한다. 위의 분석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다른 어느 부문보다 정부 부문에서 매우 심각함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雇傭割當制나 Affirmative Action 등의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여성의 人的 資源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민간부문에 그 波及效果(priming effect)를 추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위의 공무원과 전체 근로자간의 여성참여율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반대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도 여성의 인력활용에 대하여 보다 閉鎖的의이므로써 정부 공무원에 대한 고용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사회 전반에의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誘導하기 힘든 입장에 처해 있다¹⁷⁾.

다음의 <表 13>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종인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에의 여성의 진출 추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

17)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최근 정부는 여성의 고용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공무원임용시 가점부가를 통하여 여성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에 대하여 여성종사자의 목표치를 정하여 이 목표치의 달성시까지 여성임용을 확대한다는 요지의 적극적 여성고용확대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95, 10월 25일자 및 11월 8일자 기사 참조).

인가를 본다.

〈表 13〉 專門職에의 女性從事者 比率 推移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행정관리직	18.4	20.9	25.3	3.7	4.1	4.2
전문기술직				35.5	42.5	45.0
사무직	13.5	20.9	32.7	34.6	40.1	41.1
전체근로자	36.8	36.7	38.3	39.0	40.7	40.1

資料: 통계청, 『한국통계년감』, 1976, 1981, 1986, 1991, 1994.

위의 表에서 행정관리직의 여성의 점유율은 미약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인다. 1985년 이 직종의 근로자중 여성은 남성과 대비하여 3.7%를 점유했으며 이 비율은 1993년에 4.2%로 0.5%의 증가를 보일 뿐이다. 반면 전문기술직에의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85년 35.5%에서 1993년 45.0%로 같은 기간동안 약 10%가 증가하였다. 下位事務勤勞者인 사무직의 경우에도 유사한 증가 양상을 보인다.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큰 부분은 간호원, 국민학교·중학교 교사, 약사 등 여성이 밀집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앞의 〈表 9〉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전문기술직 참여율은 여타국에 비하여 크게 뒤지지 않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제한된 영향력을 갖은 전문기술을 이용하는 직종에의 종사자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活用度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남성대비 所得占有率(22.0%)은 선진국 및 여타 유사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에 비하여 1/2~3/4의 수준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의 남성대비 所得占有率이 적은지를 다음에서 확인해 본다. 하나의 요인은 남녀근로자간의 賃金隔差가 과도하게 별

어져 있다는 점이다. <表 14> 는 주요국들의 非農業部門의 男女間 賃金比를 나타낸다¹⁸⁾.

<表 14> 主要國들의 非農業部門의 男女間 賃金比('87~'91)

(단위: %)

	스웨덴	서독	싱가폴	홍콩	영국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여성임금비율 (남성대비)	89.0	73.6	71.5	69.0	67.0	63.0	59.0	54.5	50.8

資料: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2.

위의 表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非農業部門의 男女間 賃金比는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에 크게 뒤져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싱가포르 및 홍콩의 남녀 임금비가 71.5% 및 69.0%임에 비하여 한국은 이에 크게 뒤지는 54.5%에 불과하다. 특이점은 선진산업국의 일원인 일본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50.8%(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43.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회구성원의 능력을 균형있게 개발하고 발휘토록하여 구성원 모두의 삶의 質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人間開發理念의 측면에서 일본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여성의 所得占有率이 매우 작은 또다른 요인으로는 여성의 有給經濟活動 參加者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기때문이다. 먼저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인구비율을 살펴본다.

<表 15> 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은 전체 노동인구의 51%에 불과하여 선진국(70~90%) 및 홍콩(57%), 싱가포르(64%)에 크게 뒤진다. 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은 1994년 47%를 기록

18)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남녀의 임금구조에 있어 국가간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급적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농업부문의 임금만을 비교하며 선진산업국들에 비교의 범위를 제한한다.

하여 싱가포르(50.6%), 일본(50.3%), 미국(55.7%), 독일(58.9%)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낮다. 여성의 所得占有率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低調하기 때문임과 함께 여성취업자의 많은 비율이 무임금의 가족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無賃金家族從事者 비율이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어느정도 규모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간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다음의 <表 16>은 여성취업자중 無給家族從事者 비율을 나타낸다.

<表 15> 主要國들의 女性の 勞働人口 比率(1990)

(단위: %)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싱가폴	홍콩	한국	칠레
여성노동인구비율 (남성대비) ¹	92	81	74	74	68	64	57	51	45

註: 1) 노동인구의 범위에 민간인 경제활동인구 및 군인이 포함됨.

資料: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1993.

<表 16> 女性就業者中 無給家族從事者 比率('87~'91)

(단위: %)

	스웨덴	미국	캐나다	싱가폴	서독	칠레	일본	한국
여성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5	0.5	0.8	2.0	3.7	4.2	15.2	23.2

資料: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2.

위의 表는 우리나라의 여성이 서구선진국 및 싱가포르와 칠레에 비교하여도 현저하게 많은 비율이 無給家族勞働力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을 제외한 이들 모든 나라들의 경우 여성의 취업자중 無給家族從事者 비율이 5%에 못미침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23.2%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여성의 남성대비 所得占有率이 낮은 이유는 여

성의 경제활동 종사율이 여타국에 크게 뒤질 뿐만아니라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하여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無給家族勞動力으로 참여하며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임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참여의 각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에 있어 권한 부여정도가 낮은 요인은 정치 및 경제구조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은 다른 어느 영역보다 公共部門에서 뚜렷하다. 결국 평균적인 尺度로서의 韓國인의 삶의 質은 세계 31위이나 사회구성원 남녀간의 축적된 人的 資源의 발휘를 통한 삶의 質의 배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後進 狀態에 있음을 확인한다.

3. 高齡化社會의 到來와 韓國人的 「삶의 質」

高齡人口의 比率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층과 고령자들간의 삶의 質의 隔差 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를 통한 自己完成 追求라는 측면에서 보다는 사회활동에서 은퇴하여 福祉受惠者로서 餘生을 지내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우선하였으며, 그 결과 노인의 입장으로 부터 출발하여 노인인구의 사회활동을 증진시키려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의 부담을 어떻게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가족간에 分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본 절에서는 활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얼마나 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와 여타국들간에 비교를 시도한다.

이러한 접근을 선택하는 이유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구성원의 역할

및 사회적 지위와 권리가 주로 사회활동으로 부터 부여되기 때문이다. 일을 통해서 社會集團 또는 社會制度에 所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고, 친구관계나 직장동료와의 관계등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의식하게 되며, 자신감을 갖게 되며,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리듬과 규칙성을 갖게 되고, 정서적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人間開發의 側面에서 본 삶의 質의 高揚을 위하여 활동능력이 있는한 고령자를 사회활동에 충분히 참여시키는 것이 노인 복지의 첫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 수준을 외국의 노인들과 비교해 보자.

〈表 17〉 60歲의 平均 期待壽命('89~'90)

(단위: 년수)

	일본	스웨덴	프랑스	미국	영국	OECD평균	한국
남	20.0	19.1	18.8	18.6	17.4	18.6	15.5
여	24.4	23.3	24.0	22.7	21.7	23.0	20.1

資料: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199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위의 表에서 高齡者들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指標의 하나로 60세 인구의 平均期待壽命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60세 노인은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약 3년 정도 期待壽命이 작다.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에 비하여 嬰兒死亡率이 1.5배 이상 높아서 출생시의 期待壽命에서는 이들 나라들과 5~7년의 隔差를 보이나 일단 60세까지 살게되면 건강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平均期待壽命이 줄어들게 되는 정도는 반으로 감소한다. 다음으로 活動障礙가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에 있어서 한국의 노인들은 선진국에 비교하

여 얼마나 차이가 날것인가를 살펴본다.

〈表 18〉 出生時 健康期待壽命의 國家間 比較

(단위: 년수)

	캐나다 (’78)	프랑스 (’82)	미국 (’80)	영국웨일즈 (’85)	네덜란드 (’81~’85)	한국 ¹⁾ (’89)
남	59.2	61.9	55.5	58.7	58.8	60.5
여	62.8	67.2	60.4	61.5	57.3	63.8

註: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조사(1989) 자료등에 의거해 산출되었음.

資料: 윤병준(1995)에서 재인용.

위의 表는 각국의 건강수준에 관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출생시 활동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期待壽命을 나타낸다. 이는 수명의 質을 측정하는 概念으로서 국가간 연구의 시점 및 계산 방법의 차이로 이들 나라들간의 엄격한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나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출생시 활동장애가 없이 60~63년간 건강한 생활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선진국의 1970~1980년대의 수준에 근접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60~64세에 도달한 노인이 건강하게 살 期待餘命은 남자 10.97년, 여자 12.87년에 달한다(윤병준, 1995:70). 이러한 분석은 60세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健康能力을 平均的으로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러한 건강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참여의 기회에 있어 한국의 노인들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큰 隔差를 보인다. 資料의 제약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일을 통한 사회참여의 국가간 비교는 본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으나 대신 경제활동에의 참여 현황을 비교하므로써 우리나라 노인의 社會活動 參與水準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의 表에서 55세 이상 인구의 經濟活動參與率을

비교해 본다.

〈表 19〉 55歲 以上 人口의 經濟活動參與率 比較

(단위: %)

	스웨덴 '70('84)	서독 '70('84)	영국 '70('84)	미국 '70('84)	일본 '90	한국 '90	홍콩 '90
남자							
55~59	90.9(87.2)	89.2(80.1)	93.1(82.0)	89.5(80.2)	92.1	77.5	81.0
60~64	78.1(68.4)	74.7(35.2)	82.9(56.7)	75.0(56.1)	72.9	61.3	54.5
65세 이상	28.9(11.1)	30.6(9.4)	30.4(16.6)	26.8(16.3)	36.5	36.1	21.2
여자							
55~59	54.6(72.1)	37.2(40.2)	50.9(51.1)	49.0(49.8)	53.9	38.8	26.9
60~64	34.5(46.2)	22.5(11.8)	28.8(21.2)	36.1(33.4)	39.5	29.1	18.2
65세 이상	8.7(3.8)	10.7(4.5)	6.3(3.0)	9.7(7.5)	16.2	11.3	5.9

資料: Mirkin, 1987.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1, 1992.*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2.

서구산업국의 경우 1970년대 이래 남자 노령인구의 經濟活動參加率は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두차례에 걸친 오일과동에 따른 경기하강으로 인한 실업율증가에 대응하여 早期退職制度나 연금수령연령을 낮추는 등 노령인구를 早期에 은퇴시키도록 하는 정책을 취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¹⁹⁾. 연금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하여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기 위하여는 이들 나라의 최근의 資料와의 비교 보다는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율이 하락하기 이전인 1970년대의 資料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有意味하다²⁰⁾.

19) 서구산업국의 조기퇴직제 및 연금연령을 낮춘데 따라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감소한데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관하여는 Kohli, et al. (1991)을 참조할 것.

20) 선진국에서 1970년대 이전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고령자의 고용을 높은 수준에 머물도록한 요인으로 지적되므로,

위의 表를 보면 55~59세 남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77.5%의 經濟活動參加率을 보임에 비하여 선진산업국들은 약 90%의 참가율을 보여 우리나라 보다 약 15% 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여 한국 여성은 이 연령대에서 38.8%의 참가율을 보임에 비하여 선진국 여성들은 50% 이상의 참가율을 기록한다. 60~64세의 연령집단의 경우 선진국과의 隔差는 남녀 모두 10~15%의 차이를 보인다.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경우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의 많은 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經濟活動參加率에 있어서의 선진산업국들과의 隔差는 실제의 隔差를 過少評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진산업국들의 경우 농업인구는 전체 취업자의 3~5%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1990년 18.3%에 달하며 많은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선진산업국들과의 엄밀한 비교를 위하여는 비농업부문의 노인들의 취업상황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도시와 非도시간의 거주지역별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분해 보았다.

예상한 대로 도시지역거주 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농촌지역과 큰 隔差를 보인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5~59세 및 60~64세 남자의 경우 각각 69.1%와 44.1%의 참가율을 보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經濟活動參加率이 급격히 하락하나 농촌지역의 경우

연금제도로 인한 고령자의 고용촉진효과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와의 단순비교는 이러한 연금제도의 고용 효과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의 주요 동기가 소득을 얻려는 데 있고 일자리가 있을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잠재실업자 집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가옥, 1994; 고령자취업알선센터, 1995), 우리나라 고령자취업의 현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70년대 이전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다.

(각각 90.3%와 83.4%임) 연령이 증대하여도 큰 하락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서구선진국들의 경우 60~64세에도 78.1%의 경제활동참여율을 기록하는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여자의 경우도 동일한 유형을 보여 도시지역거주자의 경우 55~59세 및 60~64세에서 각각 20.4%와 11.9%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록하나 이는 선진산업국들의 동일한 연령대의 참가율인 50% 및 30~40%와 큰 隔差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도시노인은 선진산업국들에 비교하여 經濟活動參加率이 크게 低調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우리나라 도시노인의 低調한 經濟活動參加率은 홍콩의 노인들과도 큰 隔差를 보인다. 55~59세 및 60~64세 노인들의 경우 홍콩의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도시노인 보다 약 10%정도 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表 20〉 居住地域別 年齡帶別 高齡者의 經濟活動參加率

(단위: %)

연령구분	시부거주자		군부거주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55~59	69.1	20.4	90.3	64.6
60~64	44.1	11.9	83.4	52.1
65세 이상	18.9	3.5	53.5	21.0

資料: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2.

우리나라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이렇게 低調한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55세를 停年年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데 비례해 임금을 조정시킬 수 없는 年功序列制 고용관행에 기인하는 바 크다.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55세 이하를 停年으로 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전체의 65.8%에 달하며 56~59세 停年이 25%를 차지한다(노동부,

1993). 이렇게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의 일부는 自營勤勞者 혹은 無給家族從事者로 전환되나 많은 수가 경제활동에서 퇴장함은 위의 經濟活動參加率 比較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再就業의 경우에도 본인의 일하려는 욕구와 실제의 고용현황과 큰 隔差를 보인다.

<表 21> 高齡就業者의 從事狀態와 就業希望雇傭形態의 比較

(단위: %)

	취업상태('93)		취업희망
	전 체	60세 이상	55세 이상
비임금근로자	39.1	73.5	21.4(자영자)
고용주	7.1	3.6	-
자영자	21.3	50.3	-
무급가족종사자	10.7	19.6	-
임금근로자	60.9	26.5	78.6
상시고	52.0	15.8	37.5
임시고	8.9	10.7	41.1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1994.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취업욕구조사』, 1995.

위의 表는 고령취업자의 종사상태별 현황과 취업희망 고용형태와의 比較를 보여준다.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취업상태 資料와 도시지역의 취업알선기관에 의뢰된 고령취업자의 資料를 比較한 것이므로 엄밀한 比較는 어려울 것이나 전반적인 현황을 推論하는 데는 유용할 것이다.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상태를 보면 안정된 취업상태에 있는 (雇用主 및 常時雇傭賃金勤勞者) 노인취업자는 19.4%에 불과하며, 비임금근로자가 73.5%를 차지하여 전체경제활동인구의 비임금근로자 比重(39.1%)보다 거의 두배나 된다. 이는 도시지역 고령자들의 4/5가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며 이중 약 절반이 常時雇傭形態를 원하는 것과 대조된다²¹⁾.

위의 분석을 요약하면, 선진산업국의 노인들에 비교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활동참여 수준에서 크게 뒤져 있으며 비경제적인 사회 참여의 부분을 고려할 때 이러한 隔差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는 농촌 노인의 경우²²⁾ 활동능력이 있는 한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經濟活動參與率 면에서 선진국의 노인들에 뒤지지 않으나, 반면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 사회활동으로 부터 早期退場으로 인한 삶의 質의 低下 問題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한 노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도시 노인의 현주소임을 지적한다.

21) 위 자료는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이 취업알선기관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영업 종사회망자의 비율이 실제 보다 과소평가된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22) 1990년 60세 이상 전체 노인의 45.3%가 군부지역에 거주하며 55~59세의 경우 40.6%가 이 지역에 거주함.

III. 結 論

본 글은 UNDP의 人間開發報告書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國際的 位相을 검토하면서 경제적인 발전 수준과 비교하여 人間開發을 통한 삶의 質의 수준과 함께 우리사회 構成員들의 均等한 삶의 質 高揚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다. 본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人間開發 程度는 경제력 수준보다 약간 上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人的 資源의 開發이 타국가들에 비하여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한 삶의 정도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전반적인 보건수준이 낮음과 함께 경제활동에서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남성의 平均壽命이 짧은데 기인한다. 한국의 여성들은 人間開發 및 능력의 발휘 정도에서 남자와는 매우 큰 隔差를 보인다. 人的 資源의 육성 측면에서 볼때 한국의 여성들은 高等教育機關 就學率에 있어서 남성들 보다 많이 뒤떨어 지며 이러한 隔差가 가까운 장래에 크게 개선될 소지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參與 機會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排除되어 있으며, 단지 기술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에 있어서만 제한적인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이는 行政관리직에의 참여정도, 經濟活動參加率, 無給家族從事者比率, 所得占有率, 비농업부문의 남녀간 임금비율 등의 모든 指標에서 선진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홍콩, 싱가포르와도 큰 隔差를 보이는 데서 드러난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參與障壁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高齡者의 건강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여 조금 뒤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반하여

사회활동 참여 정도는 선진국에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의 경우 우리나라 노인은 선진국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선진국과 큰 隔差를 보인다. 이는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위한 건강능력과 취업희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족시킬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인의 전반적 삶의 質의 고양을 위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위의 분석에서 뚜렷이 제시된다. 人的 資源 育成 機會에 있어서의 사회구성원간의 過度한 隔差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사회활동 능력이 있는 구성원의 社會活動 機會를 擴大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회활동이 구성원의 일부에게 치우침은 구성원간 사회적인 부의 偏在와 함께 그들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의 가중을 초래한다. 한국의 젊은 남자근로자 특히 40대의 사망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선진국에서 여성과 고령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몫이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남성에게 과도하게 부과됨으로서 나타난 문제점의 하나로 해석된다. 이는 부담의 과다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서 상대적으로 排除된 집단에 대한 삶의 質의 저하 및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過多 負擔에 따른 문제를 유발한다²³⁾.

경제발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의 삶의 質의 高揚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 국민의 人的 資源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하겠다. 이는 복지차원에서의 고려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임으로서 국제경쟁력

23) 남성에게의 경제적 역할이 과도하게 부담됨으로서 나타나는 가족 및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는 Benard(1981)의 분석을 참조할 것.

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매우 큰 隔差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삶의 質 高揚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함을 파악하게 된다. 먼저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에 있어 우리나라의 公共部門이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에서 公共部門의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정책이 구사되어야 한다²⁴).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이 보이듯이 민간부문의 여성고용의 波及效果가 발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균등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지역 고령자의 경우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다.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의 문제는 福祉의 관점과 함께 사회적인 失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年功序列制와 같이 우리나라 고령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에 대한 현실적 조정 노력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사회의 현재 남성근로자들에게 집중된 사회활동에의 부담과 이에 따른 결과인 여성과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제한을 해소하려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유도 및, 장애적인 요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선진국과의 거대한 隔差는 쉽게 좁혀지기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質의 構成員間 配分에 있어서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빈부간의 隔差의 문제를 資料의 제약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24) 정부 주도에 의한 적극적인 여성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에 관하여는 김태홍(1995)와 이향순(1995)를 참조할 것.

參 考 文 獻

- 강동식, 「삶의 질 지표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3집(인문사회과학편), 1991, 437~59쪽.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취업육구조사』, 1995.
- 김재인, 「여성교육과 여성의 지위변화」,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연구원, 1995(가을호).
- 김태홍, 「노인·장애인·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안)」, 국민복지기획단 세미나 발표논문, 1995.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4.
-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이향순,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평등 조치」, 한국노동연구원, 여성고용촉진과 고용평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발표 논문, 1995.
- 윤병준, 「건강수명 개념에 의거한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주학중, 「사회지표의 체계와 활용」, 『한국개발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81.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 _____, 『여성의 사회활동실태 국제비교』, 1995.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93.
- _____, 『한국통계연감』, 1976, 1986, 1991, 1994.
- _____,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6권 경제활동, 1992.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 Atkinson, Anthony 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2, No.3, 1970, pp.244~63.
- Bernard, Jessie, "The Good-provider role: its rise and fall," *American Psychologist*, Vol.36, No.1, 1981, pp.1~12.
- Campbell, A., P. Converse, and W. Ro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Coulter, Philip B., *Measuring Inequality: A Methodological Handbook*,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9.
- Haq, Mahbub ul, *Reflections on Huma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1, 1992.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 Kohli, M., M. Rein, A. M. Guillemard, and H. van Gunsteren, (eds.), *Time for Retirement: Comparative Studies of Early Exit from the Labor Force*.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Mirkin, Barry Alan, "Early retirement as a labor force policy: an international overview," *Monthly Labor Review*, Vol.110, No.3, 1987, pp.19~33.
- Schuessler, K. F. and G. A. Fisher,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11, 1985, pp.129~49.
- Slottje, Daniel J., Gerald W. Scully, Joseph G. Hirshberg, and Kathy J. Hayes,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1.
- U.N., *1992 Demographic Yearbook*, 1994.
-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4.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3*, 1994.

Vermunt, R., E. Spans and F. Zorge, "Satisfaction, happiness and well-being of Dutch students." *Social Indicator Research*, 1987, pp.1~33.